

한일관계와 소통의 전제조건¹⁾

김경주 _ 도카이대학 준교수

불통의 현실

최근 한일 관계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양국의 정부 관계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빌지 않더라도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이다. 일본 내각부가 실시한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4년 12월 시점에서 한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일본인이 전체의 66.4%에 달해 “친근감을 느낀다”는 비율(31.5%)을 크게 앞섰는데, 이와 같은 수치는 본 여론조사가 실시된 1978년 이래 최악의 수치라는 점이 주목된다.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비호감이 호감을 압도하는 현상은 과거 1990년대에나 나타나던 것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한일 관계의 크고 작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호감도가 비호감도를 늘 상회해 왔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3~4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한 한국에 대한 비호감도를 일시적인 감정적 여론으로 치부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우리의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일본의 특정비영리법인 언론 NPO와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이 올해 6월에 발표한 공동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갖고 있다”는 한국인은 72.5%로, 한국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갖고 있는 일본인의 비율(52.4%)를 크게 상회한다.

1) 본 논고는 『통일시대』 97호에 게재했던 내용을 가필, 수정한 것임.

비슷한 현상은 요미우리신문과 한국일보의 공동여론조사 결과(『讀賣新聞』 2014년 6월 9일자 보도자료)에도 나타나는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일본인이 전체 응답자의 73%였는데 반해, “일본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답한 한국인의 비율은 83%로, 한국 측의 일본에 대한 불신은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일관되게 일본을 능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국민감정의 악화가 역사 인식과 영토를 둘러싼 의견 대립 등 많은 부분이 정치적 갈등에 기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가 이를 신속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서로가 자신의 타당성만을 주장하며 상대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이데올로기적 대결 구도로 치달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언론NPO와 동아시아연구원의 2015년 공동 여론 조사에서도 서로가 좋지 않은 인상을 갖는 이유로 일본 측이 역사문제74.6%, 다케시마 문제36.5%, 한국 정치가의 발언28.1%를 꼽았고, 한국 측 역시 역사문제74.0%, 독도문제69.3%, 일본 정치가의 발언24.7% 순으로 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국민 여론 차원에서의 대립 양상은 일본 국내에선 혐한론과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를 방관하는 현실을, 한국 국내에서는 친일과 반일이라는 이분법적인 척도로 우리의 근현대사를 인식하려는 풍조를 정당화하고 있다. 소통의 부재, 즉 불통의 방치란 상황을 잠시 쉬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악화를 초래한다는 것이 한일관계가 처한 오늘날의 현실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소통의 전제조건

이러한 현상을 두고 정치학적으로는 동아시아에서의 중국 부상에 따른 역학 구도의 변화가 지역 국가들의 내셔널리즘 혹은 민족주의적 경향

을 강화시켰다고 분석한다. 또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따른 글로벌리즘의 확산이 국내적 취약 계층을 양산함으로써 그러한 경제적 약자들의 불만이 대외적인 우경화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러한 원인 분석은 동시에 다양한 해법의 제시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2009년에 발족한 ‘한일신시대공동연구프로젝트’의 2013년 보고서에서는 21세기의 동아시아 정세를 ‘복합화의 시대’로 규정하고, 이에 걸맞는 한일 양국의 관계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는 안보, 경제, 과학 기술 등과 함께 ‘문화, 지식, 언론의 교류 촉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보편적 사고와 문화를 공유하는 인식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일 양국의 갈등이 국민감정의 대립으로 파급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유럽 연합의 ‘아르테(ARTE)’와 같은 한일 양국에 의한 공동방송국의 운영은 분명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²⁾. 그러나 이러한 대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소통의 구조적인 문제, 특히 그 주체자로서의 언론의 역할과 국경을 넘나드는 정보의 수용 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각이 우선되어야 한다. 오늘날 한일 양국의 언론 정보가 상대 국가에서 ‘반일(反日)’과 ‘혐한(嫌韓)’으로 규정되면서 국민감정의 악화로 이어지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우선적으로 보는 오늘날의 소통의 문제점에서 분석해야 하는 이유이다.

정보화시대라 불리는 21세기에 걸맞게 급속도로 보급된 인터넷망을 통해서 개인 간의 자유로운 정보 교류가 가능해졌다고는 하나, 일상에서 접하는 외국 관련 정보의 일차적인 발신자가 신문 및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mass media)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일본 총무성의 정보통신정책 연구소가 2012년에 발간한 『정보통신매체의 이용시간과 정보행동에 대한

2) ARTE: Association Relative à la Télévision Européenne. 독일과 프랑스 정부의 공동 출자로 1992년에 개국한 텔레비전 방송국.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90% 이상이 시사 정보를 얻기 위해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신문구독은 72%),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60%의 응답자들 역시 대부분이 신문 또는 TV 뉴스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한국의 경우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신문 및 방송이 상대국에 대한 일차적 정보원으로 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한일 양국의 대중매체의 보도가 소통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문제 의식의 공유’에서 출발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의제설정의 비대칭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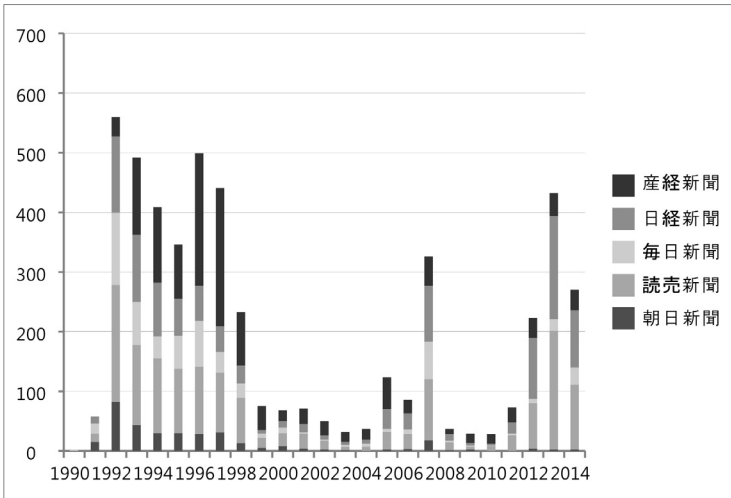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대중매체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고전적 이론 중에 ‘의제설정이론(Agenda setting theory)’이 있다. 1972년에 처음으로 제시된 이 이론은 언론 매체의 정보가 대중의 현실 의식을 구성한다는 ‘의사환경론’의 계보를 이어가면서도 그러한 정보 환경의 구성방식(의제설정 방식)이 사회의 중요 쟁점에 대한 대중의 합의 도출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혀낸 이론이다³⁾. 또한 이 이론은 언론의 의제 설정이 대중의 지각과 인식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형성된 여론이 해당 국가의 정치지도자와 정책 결정권자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도를 포괄적으로 상정하고 있다(오카다, 1992)”는 점에서 한일 양국의 역사 인식 문제를 둘러싼 갈등 구조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⁴⁾ 다시 말해 한일 양국의 역사 인식 문제를 논하는데 있어서 과연 언론은 동일한 의제 설정에 입각한 양국의 대중적

3) McCombs, M.E. and Shaw, D.L.,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Mass Media,” *Public Opinion Quarterly* 36(2), pp. 176~187.

4) 岡田直之, 『マスコミ研究の視座と課題』, 東京大学出版会, 1992.

합의를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이끌어 왔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의제를 각자가 설정하며 갑론을박의 자기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봄으로써 한일 양국의 여론 악화의 배경에도 소통의 전제 조건인 문제의식의 공유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점검하고자 한다. 만일 양국 언론의 역사 인식 문제의 보도에 있어서 의제 설정의 비대칭화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한일 양국의 역사 인식 문제는 적어도 서로의 논리적 정당성의 문제가 아닌 의제 설정을 둘러싼 패권 다툼의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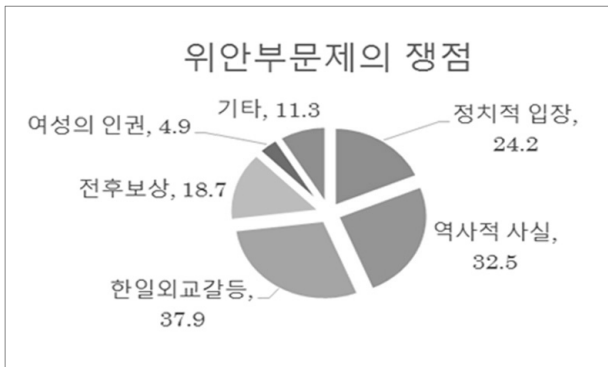
아래에서는 양국 관계의 현안이 되고 있는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한일 간의 쟁점적 차이가 소통의 부재와 상호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일본의 5대 일간지가 1990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위안부문제를 다룬 신문기사 총 3,322건을 보도 시기별로 정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일본 5대 일간지의 위안부문제 보도 추이: 1990~2014.4

위 그래프에서 추론되는 것은, 적어도 2000년대 이후에는 위안부문제
 제가 일본 사회 스스로가 직시해야 할 역사 문제로서가 아니라 한일 간의
 역사 인식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현저하다는
 점이다. 그 근거로 이 문제가 한일 간의 현안으로 대두되었던 1991년을
 기점으로 1992-98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이후에는 거의 주목을 받
 지 못하다가, 다시 2007년과 2012년 이후에 집중적인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시점은 모두 아베내각의 집권 시기와 일치하며 한일
 간의 역사 인식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현된 시기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2005년과 2011년에 보도가 미세하게 증가하는 시점 역시 고이즈미정권
 및 노다정권과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한일 정부 간의 마찰이 고조되던 시
 기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위안부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쟁점을 정리하여 그 쟁점들
 이 일본 언론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검토하였다. 위안부문제
 를 둘러싼 문제 의식의 유형은 선행연구 등을 통해서 크게 4가지로 분류
 되어 왔으며 (1)일본 정부의 공식적 견해 및 입장 문제 (2)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 문제 (3)한일 간의 외교적 문제 (4)전후 보상 문제 (5)보편적 여
 성의 인권 문제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분석한 전체적인
 기사 내용의 의제 설정 유형은 아래와 같다. 구체적으로는 위안부문제



기사 내용의
 의제 설정 유형

한일 양국의 외교적 갈등 요인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37.9%) 역사적 사실의 문제(32.5%)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문제 (24.2%)의 순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한일 간의 외교적 갈등’의 경우 한국 및 미국에 세워진 위안부소녀상 및 기림비 문제가 반복적으로 다루어지는 등, 한일 간의 해결 과제라는 문제의식에서 국제사회 속에서의 한일 갈등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 입장’ 역시 과거에는 고노담화의 계승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이 최근에는 고노담화의 타당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2007년과 2012년 이후에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쟁점 또한 “일본군에 의한 강제 연행이 존재하였는가?”와 같이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반면에 한국에서 주로 설정되는 의제인 ‘보편적인 여성의 인권 문제’라는 관점은 4.9%에 불과하며 ‘전후 보상 문제’로서의 의제 설정 역시 1990년대에 집중되고 있어, 2000년대 이후에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기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지난 8월 5일과 6일에 아사히신문이 돌연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과거의 보도를 일부 취소하는 특집 기사를 게재한 것도 이와 같은 일본 국내의 분위기를 의식한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소통의 부재를 넘어서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한일 양국의 방송 신문 등의 대중 언론이 그 동안 주장하고 호소했던 위안부문제에 대한 논의는 결국 대결 아닌 대결로, 논쟁 아닌 논쟁으로 귀결되면서 서로의 국내적 관심과 감정에 매몰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 언론의 보도 자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불리 일망타진 식의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으나, 의제 설정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 의식의 불일치가 결국에는 소통의 부재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비단 위안부문제 뿐만아니라 야스쿠니와 역사교과서문제, 집단적자위권문제, 독도 문제 등, 한일 간의 모든 정치적 현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를 바로 잡고 논의의 쟁점화와 구체화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정치권 역시 이러한 국내 언론의 의제 설정 프레임에 갇혀버린다면 그 발언 또한 외교적 메시지로서의 동력을 상실한 우물 안 개구리의 일방적 독백에 그치고 만다. 미국의 인지언어학자인 레이코프(Lakoff)는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와의 소통을 우리는 종종 '전쟁의 은유'로 인식한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전략적인 진영 논리와 비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는 메아리로 되 돌아오는 현실에서는 한일 양국의 언론이 오히려 소통의 장애가 되고 있음을 자성해야 한다. 소통이란 함께 건물을 쌓아가는 공동작업이요, 긴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와의 협력 과정임을 상기하면서 공통 언어로서의 의제 설정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절실한 때이다. **日本空間**